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와 미국의 패권주의

글 · **이철기** lcg@mail.dongguk.ac.kr

처음부터 잘못한 군대 파병

2명의 남성 인질이 살해당하는 참극을 빚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인질사태가 장기될 조짐이다. 한국 정부와 탈레반 사이의 직접 대면상을 통해 일부 인질들이 석방되는 성과를 얻기는 했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탈레반 측이 한국인 인질과 탈레반 수감자의 맞교 주장을 철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로써는 뾰족한 수가 없는 편이다. 사실상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고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이 "테러단체와는 상하지 않는다."는 원칙만을 고수한 채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탈레반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인질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악플들이다. 우리 사 안에 만연해 있는 또 다른 폭력성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실례다. 그들의 다소 무모한 의료 선교동을 탓하기에 앞서, 아프간에 군대를 파병하고 지 상을 왜곡해 온 우리 정부와 진실보도를 외면해 온 우리 언론들이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인질 참극은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다. 선의의 목적으로 아프간에 간 23명의 민간인들을 위에 빠트린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의 잘못된 침략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내면서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다산 동의부대가 의료와 구 지원을 위해 파병된 비전투부대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아프간인들에게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들어온 침략군일 뿐이다. 다산 동의부대가 인도적 지원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정부의 선전과 달리 이들 부대의 주요 임무는 아프간에 파병된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을 위한 군사시설 개 보수와 진료동이다. 미군 전투기들이 사용하는 비행장과 주로를 보수하는 것이 다산부대의 주요한 주둔 목적이다. 동의부대 역시 미군 등 부상당한 점령군 병사의 치료가 주요 임무이다. 따라서 탈레반의 입장에서 한국의 민간인들일지라도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에 동조하는 지원하는 '적국'의 국민으로 간주할 따름이다.

> "이번 인질 참극은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때부터 이미 예견돼온 일이다. 선의의 목적으로 아프간에 간 23명의 민간인들을 위에 빠트린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의 잘못된 침략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내면서부터 시작한다."

진실보도 외면해 온 언론에도 책임

또한 아프간 상에 대한 진실보도를 외면해 온 국내 언론들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우리 언론들은 베트남전에 대한 왜곡만큼이나 아프간전에 대해서도 왜곡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해 왔기 때문이다. 언론에 비춰진 아프간 상은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들이 '악의 무리', '테러집단'인 탈레반을 소탕하기 위해 성스러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탈레반 세력은 지리멸렬해서 붕괴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운 미국의 아프간 침략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미국의 아프간 침략으로 시작되었고 아프간 상은 사태 수습은 고사하고 악일로를 걸어왔다. 부시 일가와 미국 석유사들의 도움으로 권좌에 오른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수도인 카불지역에 대해서만 겨우 통제를 유지하고 있어 '카불시장'으로 불리는 정도다. 중앙아시아와 아프간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해온 미국 석유사 유노칼의

고문을 역임했던 카르자이는 남베트남의 고 딘 디엠이나 티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에 불과하다. 게다가 권좌에서 밀려났던 탈레반은 토착군벌까지 결합하면서 '신탈레반'으로 오히려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언론은 베트남전을 '자유 수호를 위한 전쟁'으로 왜곡해 온 것 못지않게 아프간의 상황을 왜곡해 왔다. 23명은 이런 잘못된 정보와 정세인식만을 믿고 아프간에 간 것이다.

아프간 침략은 미국 패권주의의 산물

무고한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고 인질 살해를 자행하고 있는 탈레반의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다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만으로는 아프간 상황에 대한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꿰뚫어 보지 않고는 아프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냉전시대에 반공주의가 미국의 패권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였다면, 이제 반테러리즘과 자유의 확산이 탈냉전으로 퇴색해 버린 반공주의를 대신하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정당화하는 명분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패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어느 때고 '테러와의 전쟁'과 '자유의 확산'을 구실로 군사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 미국은 자신이 만든 세계표준과 룰을 전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테러단체'와 '테러지원국'이 된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 11테러를 구실 삼아 아프간에 들어갔다. 그러나 9 11테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미국은 다른 구실을 붙여 아프간을 침략했을 것이다. 미국의 아프간 침공 배경에는 아프가니스탄의 군사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아프간은 군침이 도는 전략적 지역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인도와 이란 등 아랍국가들까지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국은 아프간 침략을 통해 이미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특히 21세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잠재국으로 지목돼 온 중국의 동서 양쪽에 미군을 합법적으로 주둔시킬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 중국의 동쪽에만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 중국의 서쪽에도 미군을 주둔시켜 중국을 동서 양쪽에서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아프간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무관치 않다. 아프간은 21세기 마지막 에너지 보고인 카스피해지역을 장악하고 이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운반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광화문에서 열린 피랍자 석방을 위한 촛불 집회 **사진제공 민중연대**

>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21세기도 전쟁과 테러로 얼룩져 가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전쟁과 테러의 한가운데는 직간접적으로 미국이 존재하고 있다. 국가권력이 전쟁과 응징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하고 있는 학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테러일 뿐이다. 오히려 '국가테러리즘'(state - terrorism)은 더 광범위하고 대규모적이며 파괴적이다. 때로 그것은 사실상 학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장기전망보고서에서, 2040년이면 석유가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석유 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석유의 고갈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카스피해 유전개발이다. 이 지역에는 추정 매장량 2,000억 배럴 이상의 막대한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천연가스 매장량은 더욱 매력적이다. 카스피해지역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37%에 해당하는 1,860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쉐브론(Chevron)과 모바일(Mobil), 텍사코(Texaco) 등 미국 기업들을 비롯해 서방의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 이 지역에 이미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그런데 이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대규모 파이프라인 건설이 필요하다.

이처럼 아프간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써 패권을 누리려는 미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곳이다. 구소련에 대항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육성한 탈레반 세력을 권좌에서 쫓아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의 국가테러리즘이 빚은 비극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21세기도 전쟁과 테러로 얼룩져 가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전쟁과 테러의 한가운데는 직간접적으로 미국이 존재하고 있다. 국가권력이 전쟁과 응징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하고 있는 학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테러일 뿐이다. 오히려 '국가테러리즘'(state - terrorism)은 더 광범위하고 대규모적이며 파괴적이다. 때로 그것은 사실상 학살이다.

미국의 사회비평가인 노엄 촘스키의 표현대로라면 국가테러리즘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촘스키는 "희생된 사람의 숫자로만 보아도, 뉴욕 9 11테러사건은 그동안 뚜렷한 증거도 없이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행했던 무차별적인 공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미국의 국가테러리즘을 비난한 바 있다.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존을 위한 첫걸음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해온 미국의 자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애꿎게 한국의 젊은이들까지 그 희생물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글 **이철기** |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